

취임 한달 한동훈, 고위 당정협 데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회의서 민생 대책 등 논의... '채상병 특검법' 정치 시험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당 대표로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취임 한 달을 맞아 고위 당정 테이블에 이른바 '한동훈표' 정책을 올리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당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주로 민생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 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강조해왔다.

한 대표가 거론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문제, 유공자 예우 강화 차원에서 순직 군인 유족에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 대표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구축을 선언한 만큼, 정부-대통령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로써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부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한 대표는 당내 입지 다지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4선 이상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을 했던 한 대표는 19일 당 상임고문단과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나고 향후 원내 당협위원장들과의 회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29~30일에는 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단합대회 성격의 연찬회도 예정되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원외 대표인 만큼 당내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인연들이 향후 '한동훈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정치권에선 당내 기반 넓히기에 주력하는 한 대표가 채상병특검법 등 정국 현안을 풀어나기 위해 일종의 정치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가 제시했던 '제삼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 당내 여론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원내외 인사들

과 일단 소통하는 과정부터 밟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민주당이 제삼자 추천 방식의 '한동훈안'도 수용하겠다고 하자 한 대표는 민주당 연루설이 제기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제삼자 추천 특검 대상에 포함하는 맞불 카드를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두고 관련 내용을 제외한 김규현 변호사와 이를 처음 보도한 JTBC간 '제보 공작'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 대표가 '제보 공작'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특검법 자체에 대한 당내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대안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만들려는 승부수일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 등은 채상병특검법을 받는 순간 야당이 노리는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 정국은 한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넘어야 할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측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특검법 논의에도 진척이 있을 것"이라며 "원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일제 통치 편향’ 영상 상영 책임 물어야”

민주 “일본 강제 침탈 미화 만행”...부산 중학교·교사 문책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산의 한 중학교가 일제 통치에 대한 편향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상영한 것과 관련, 교육 당국을 향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일본의 강제 침탈 미화 교육을 하

는 나라로 만들었나”라며 “부산시교육청은 이런 참사를 벌인 학교와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부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일제가 구한말 조선의 위생·의료·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이 상영돼 부

산시교육청이 진상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일본의 강제 침탈을 미화하는 만행까지 벌어진 것”이라며 “친일 세력이 제 세상을 만나 역사 쿠데타를 자행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결국 김형서 독립기념관장을 필두로 친일을 넘어선 숭일 역사관을 가진 자들을 대한민국 국가 기관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친일 행보를 멈추고 친일 인사들을 국가기관에서 퇴출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윤 정권 국가관, 친일 매국 자백”

“김태효 ‘일본 마음 헤아려야’ 발언 황당하다”

여야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불참하는 등 갈등을 빚는 것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김형서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향해 “국민통합과 국가 변명이 원로의 소임”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회장이) 일제 밀정이란 철 지난 용어로 반일 감정을 조성하고, 반역자란 비이성적 용어로 이념 갈등을 부채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정편향으로, 실제 없는 유령과 싸우는 딱한 모습”이라며 “지하에서 지켜볼 우당 이회영 선생(이 회장의 조부)이 혀를 찰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 회장이 과거 인터뷰에서 ‘백범 김구와 유남 이승만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발언한 것을 소환해 “이 인식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역사관이고, 국민통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페이스북에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기념식이 두동강으로 갈라져 치러졌다”며 “고령의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적었다.

석 전 처장은 “이 회장은 보수와 좌파 정당을 넘나들며 마른 땅만 디뎠던 사람이다. 그 연세면 살

아오면서 세상에 진 빛을 갖기에도 모자랄 터인데 왜 빛을 새로 쬐을까”라며 “광복회장과 과거사에 사로잡혀 친일 매국 물이를 하는 야당이 있는 동안은 매년 광복절마다 이런 소동이 반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이 친일 매국임을 자백했다”고 비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이 전날 KBS 인터뷰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인가”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은 마음을 헤아려 대변을 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관이다”고 따졌다.

이어 “개인 유튜브도 이런 망언을 내놓으면 돌을 맞을 텐데, 대통령의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가 한 말이라니 역장이 무너진다”며 “윤 대통령이 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친일을 넘어 매국으로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짓밟는 만행을 당장 멈추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환영”

주철현, 울 1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18일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 관광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진단의 규제혁신 방안은 ▲레저장비 ▲계류 시설 ▲레저 불편 해소 ▲법령·기능 정비 등 4대 분야별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해양소형선박 및 선박용 문건에 국제표준 인정 ▲마리나항만 규모에 따라 설치기

준과 개발절차 간소화 ▲노후·유류 어항 내 요·보트 계류시설 확보 ▲수상레저기구 조경면허제도 개선 ▲수중레저 활동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개선 ▲레저선박 대여시 선장 재선 관행 개선 ▲해양레저관광 법령체계 정비 ▲해양레저관광업 무 기능 강화 등이다.

주 의원은 “이번 추진단의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환영하며, 어렵게 제정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전기가 되어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